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군공항이전 6자협의체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이 서명을 마친 광주군공항이전 관련 6자협의체 공동발표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산 전남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제2차관. /뉴스시스

‘타운홀李志시’ 후 급물살... 광주 군공항 갈등 종지부

광주와 전남도의 오랜 갈등의 씨앗이었던 광주 군·민간공항이 61년 만에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 지역의 해묵은 갈등도 싹타래를 풀게 됐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각 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6자 회동(TF)을 갖고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키로 공식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광주시는 KTX 호남선 2단계가 개통하는 2027년 말, 늦어도 2028년 초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우선 이전해야 한다.

광주 하늘길은 1948년 11월 동구 학동에 비행장 활주로가 설치된 이후 이듬해 2월 민항기가 처음으로 취항하면서 활짝 열렸다. 이어 1964년 1월 광산구 송정동 현 위치로 이전한 후 여객청사와 유도로, 계류장 등을 설치하며 공항의 모습을 갖췄고 1966년 2월에는 제1전투비행단이 사천기지에서 광주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활주로를 민항기와 전투기가 동시에 사용했다.

1990년 6월부터는 한국공항공사가 광주공항을 인수·운영하면서 연 14만회 운항과 29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청사, 5만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중형기 5대를 동시에 소화하는 공항으로 성장했다.

2001년 10월에는 중국 상하이 노선이

1948년 동구 학동 개항... 1964년 1월 광산 송정 이전

제1전투비행단 광주 이전... 민항기·전투기 동시 출격

17일 6자 TF 첫 회동...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 합의

첫 취항하면서 세계로 향하는 하늘길도 개척했다.

하지만 광주공항에서 민항기는 물론 전투기 이·착륙까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소음 피해가 오랜 기간 이어졌다. 급기야 광산구 주민 3만1000여 명은 2005년 9월 소음 피해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과 동시에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이전하기로 하고 국제선부터 무안으로 옮겼다. 반면 광주시는 관광협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광주의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완전 이전하는데 거부해 왔다.

하지만 광주 광산구와 서구 상무지구 등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가 공론화하면서 2008년부터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안 주민들이 결사 반대 입장을 보이며 양 지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광주공항 소음 피해 보상 판결을 내렸지만, 광주 시민들은 “군공항도 옮겨야 한다”며 대책 위까지 꾸러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도

2011년 3월, 광주 군유비행장 이전대책위를 발족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했다.

광주와 전남도, 무안군이 결론 없는 싸움만 거듭하는 사이 2013년 8월 광주공항 인근에서 T-50 고등훈련기 추락해 2명이 순직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이전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타당성 검토 결과 적정 통보(2016년), 대선공약화(2017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군공항 전남 이전 합의(2018년),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구성(2021년)이 속속 추진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가시화됐지만 무안지역 반발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11월 합평이 군공항 이전 새 후보지로 지목되며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되고 광주 군공항·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어 2023년 12월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간·군공항 무안공항 통합 이전 합의를 발표하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엔 무안

에서 군공항 이전 첫 소음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는 무안 현지에서 주민 설득 작업까지 펼쳤지만 12월 29일 무제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여객기 참사가 발생, 무안공항이 폐쇄되면서 광주공항 이전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직후인 6월 25일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6자 TF 가동을 제안하면서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어 정부는 다음날 대통령실 주도로 3개 지자체·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 추산, 공항 시설 효율적인 배치,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속도감 있게 검토했다.

지난달 19일에는 3개 지자체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4차 회동을 갖고 민간공항 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시 1조원 지원액 중 3000억원 정부 지원, 무안에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지원 등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한 달 여만인 이날 6자 첫 공식 회동을 갖고 민간·군공항 무안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전광훈 기자

‘무안 군공항’ 착공까지 빠르면 1년... 남은 절차는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이전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2km(248만평)로 상무지구 2.5배 크기인 광주 군공항이 완전 이전하기까지는 최소 10년이 필요하지만, 사업 시행 전 마지막 단계인 ‘이전부지 최종 선정’까지는 빠르면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듬해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서명 운동, 국방부 이전 타당성 평가, 특별법 제정을 거쳐 17일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한 6자 합의가 이뤄지면서 공항 이전 절차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이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된 만큼 이후 일정은 국방부 주도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당장 내년 1월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2월까지 주민 설 명회를 마치고, 이후 3~6월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심의를 거쳐 7~8월께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시 등은 이 기간 기부대 양여 현실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공자기금 등 국가보조 방안에 대한 교 통정리를 하게 된다.

이전후부지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주민 공청회(9~10월) →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국무조정실, 10~

11월) →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 고(12월) → 주민투표(12월) → 유치 신청(12월) → 이전부지 최종 선정(국 방부, 2027년 1월) 순으로 진행된다. 이 기간 사업시행자인 광주시는 종전 부지 마스터플랜 용역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공항이전의 중요 분기점인 주민투 표는 총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 시 가결된다.

무안 군공항 이전 부지가 최종 확 정되고 나면 시행사인 광주시는 적게 는 8년, 길게는 10년 가량 새 군공항 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옛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무안군의 군 공항 유치 의사를 바탕으로 군공항 이 전법에 따라 이전지 선정 절차를 책임 감 있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전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 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절차를 최대한 압축해 최단 시간 안에 매듭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무안에서 열린 ‘광 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마 련 토론회’에서는 광주 군공항이 이전 할 경우 최적으로 무안공항 민간활주 로에서 1.9km 떨어진 무안군 망운·운 남 2개면 해안가라는 분석 결과가 처 음 공개된 바 있다. /뉴스시스

‘1조 지원에 첨단 에어로시티까지’... 무안 항공시대 맞나? 정부·광주시·전남도 획기적 지원 약속

광주 군·민간공항의 이전 합의와 함께 지원금 1조원,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조성, 인공지능·에너지신산업 구축 등 획기적 지원 방안을 약속받은 무안군의 미래 변화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 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토부)는 17일 오 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을 위한 6자회동 (TF)을 갖고 통합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른 무안지역 주민 지원 사업 규모는 광주시 자체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 이다.

무안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국가농업 인 공기능 전환(AX) 플랫폼 구축,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센터 등 미래 산업 기반 도 조성한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농업 인공기능 실증센터 구축과 항공 유지·보수·정비 사 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이 일부 반영됐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과 추 가 지원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을 통해 반도체·에너지신산업 등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중심으 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합의문에 담겼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물류·주거·교육 기능이 융합된 ‘미래 첨단 에어로시티’ 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27년 말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 까지 개통하면 무안은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서남권 대표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논의 과정에서 지역 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 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 했다. /뉴스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교실에서
찾은 희망,
희망을 키우는
광주교육